



원자력 거버넌스, 새로운 프레임이 필요하다

조성경
명지대학교 교수



- 고려대 언론학 박사
- 아주대 에너지공학 박사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 국토정책위원회 위원
- 에너지위원회 위원
- 공기업 · 준정부기관예비타당성조사 자문위원회 위원
- 바른과학기술사회실천을 위한 국민 연대 편집보도위원장
- 여성과학기술인총연합회 총무이사

현재 온전한 공공성 혹은 일부 공공성을 이식받은 원자력 관련 활동은 크게 연구개발과 산업, 진흥과 규제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연구개발의 경우는 미래부와 원자력연구원이 주축을 이루며 산업의 경우는 산업부와 한수원이 중심에 있다.

원자력진흥위원회는 규제를 제외한 모든 원자력 관련 정책을 최종적으로 심의 · 의결하는 책임을 갖고 있으며, 원자력 관련 시설 인허가 및 방사선을 포함한 안전규제에 대한 책임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갖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겹치는 분야가 있어 책임 여부가 공중에 떠다니기도 하고, 그 어느 곳의 범주 안에도 들지 않는 사각지대도 존재한다. 그러다보니 각 책임 주체 간에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기도 한다.

'에너지 공급'과 '폐기물 관리' 프레임

대한민국에서 원자력의 역할은 에너지 공급을 통한 에너지 안보에 있다. 안전성, 경제성, 기후 변화 대응성을 갖추었을 때 원자력 에너지의 가치는 발휘된다.

원자력 발전이 최초로 도입되던 1970년대와는 원자력을 둘러싼 사회적 여건도, 시대적 요구도 달라졌다. 당시 원자력이란 단어는 과학기술 강국, 경제 발전이라는 색을 강하게 입고 있었다. 핵무기 개발이라는 모호한 빛깔이 보



새로운 거버넌스를 꾸리고 원자력에 대한 논의의 장을 국민을 향해 열어놓을 때가 되었다. 에너지 공급을 위해 얼마만큼의 역할이 필요한지, 그 역할을 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지, 만약 에너지 공급원으로서의 원자력 발전을 일부 혹은 전부 포기한다면 그로 인해 감내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정직하고 이해할 수 있게 펼쳐놓고 함께 이야기하고 고민해야 할 때가 왔다.

이는 듯 보이지 않는 듯 물어나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문제는 그 어느 분야와도 구분되어 독립적으로 다루어졌다. 그리고 그러한 특별 대우를 바라보는 시선 역시 불편하지 않았다.

현재 원자력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단순하고 분명하다. 물론 여전히 과학기술 차원에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에너지 공급이라는 기본에 충실한 후 따라오는 부가가치일 때 의미가 있다. 핵무기 개발은 현 시점에서는 우리 몫이 아니다. 정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리는 원자력 활동을 더 이상 진흥과 규제 혹은 연구 개발과 산업 프레임에 가둬두어선 안 된다.

원자력의 문제를 에너지 공급과 폐기물 관리 프레임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안전 규제는 이 프레임을 아우르는 절대적 가치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안전 규

제의 문제는 그 어떤 것과도 대등한 관계에서 조정되거나 타협될 수 없다.

폐기물 역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원자력 발전의 부산물이지만 이를 굳이 에너지 공급 차원에서 다루지 않고 따로 떼어놓는 이유는 원자력을 통한 에너지 공급이 멈춘 이후에도 폐기물의 문제는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폐로의 문제는 폐기물 관리보다는 에너지 공급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에너지 공급이라는 사이클을 마감하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차원의 원자력 거버넌스 필요

이러한 프레임으로 바라보면 원자력과 진흥이라는 조합은 타당하지 않다. 진흥은 떨어져 일어남 또는 떨어져



일으킴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다. 이미 대한민국의 원자력은 일어나 에너지 공급이라는 궤도에 들어서 순항 중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정상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역할을 해야 할 때까지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원자력 거버넌스가 요구된다.

진흥의 문제인가 규제의 문제인가가 아니라 에너지의 문제로 원자력을 다루어야 한다. 에너지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산업 정책과 기술 개발 정책 그리고 인력 운용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원자력을 사용हे은 책임의 차원에서 폐기물 관리를 받아들여야 한다. 따라서 원자력의 문제는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가 에너지 공급뿐 아니라 폐기물 관리까지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

총리가 위원장인 현재의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역할은 지금까지로 충분하다. 이제는 만약 설치가 가능하다면 에너지부가 원자력에 관한 모든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원안위의 권위와 독립성 높여야

주지한 바와 같이 안전 규제는 절대적 가치를 갖고 있다. 따라서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단순히 위원장이 차관급이나 장관급이나 혹은 그 이상이나의 문제가 아니다. 권위의 문제이고 독립성의 문제이다.

권위를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철저히 전문성과 공정성으로 무장하는 것이 우선이다. 여기서 말하는 독립성은 사업자로부터의 독립성과 타부처로부터의 독립성뿐이 아니다. 정치로부터의 그리고 국회로부터의 독립성도 포함된다.

립성도 포함된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정부 추천, 여당 추천, 야당 추천으로 구분해 위원을 구성하는 것은 철폐되어야 한다. 절대적으로 원자력을 선호하거나 이념적으로 원자력을 혐오하는 경우도 배제되는 것이 상식적이다.

말 그대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 문제를 규제 차원에서 기술적, 법적, 보건적, 생태적, 사회적, 인지적 차원에서 냉정하게 분석하고 집단 지성으로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판단은 어떤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한다.

물론 안전 요건을 정확하게 충족하여 인허가되었다고 반드시 해당 시설을 건설 혹은 운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인허가가 나지 않으면 건설하거나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인허가가 났다하더라도 건설하지 않거나 운영하지 않는다고 문제가 되진 않기 때문이다.

국민을 향해 열어놓을 원자력 논의의 장

새로운 거버넌스를 꾸리고 원자력에 대한 논의의 장을 국민을 향해 열어놓을 때가 되었다. 에너지 공급을 위해 얼마만큼의 역할이 필요한지, 그 역할을 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지, 만약 에너지 공급 원으로서의 원자력 발전을 일부 혹은 전부 포기한다면 그로 인해 감내해야할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정직하고 이해할 수 있게 펼쳐놓고 함께 이야기하고 고민해야 할 때가 왔다.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감정에 치우치거나 정보가 왜곡되어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충분히 알리고 필요하면 설득하고 그리고 또 들어야 한다.

원자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해서. 🌍